

與 “내일 의장단 선출·다음주 상임위 구성”

지도부 “개원, 협상 대상 아냐” 원구성 갈등 통합당 압박 “3차 추정·민생법 심의 착수 일 하는 국회 모습 보여줄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단독 개원을 강조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를 착수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개원 국회에서부터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높다”고 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 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께서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개원 국회에 반드시 함께해서 여야가 함께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난 상황 속에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연다”면서 “5일 국회 문이 열리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전철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



이해찬-김종인, 여야 대표로 재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섯 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6월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원 구성과 관련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과거의 관행에 따르지 않겠다

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 말만으로도 야당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만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면서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오�히려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려는 것이다. 야당은 법을 넘어서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차라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미래통합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5일 개원되면 3차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전형적인 구태다”면서 “통합당이 주장하는 관행과 전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다시 가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환영받지 못한 ‘양향자 1호 법안’

역사왜곡처벌법, 5·18 개정안과 중첩돼 처리 지연 우려 지역 의원 중 이개호·서삼석만 참여... 정치권 “전략 부재”

민주당 양향자 의원(서구 을)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에 이개호·서삼석 의원을 제외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의 역사왜곡처벌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31명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개호·서삼석 의원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이자 동료 초선의원의 1호 법안에 같은 지역 의원들

이 대거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포함된 양 의원의 법안 내용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병합처리시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주목받는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양 의원의 법안에서 공동발의 요청이 있었지만 당론으

로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지와 의욕은 알겠지만 이번 법안 발의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개호 의원 측은 “법안 내용이 좋아서 참여했다”며 공동발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 측에서는 “당론 법안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뒤,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최다선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양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그리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금태섭 징계’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고위 개의 전이 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급 자체를 당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행위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계를 옹호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개호 ‘고향세법 제정안’ 대표발의

도시-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일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의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 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삼아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자가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을 주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 의원은 “지방체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체제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승남 1호 법안은 무역이익공유제 관련법

FTA 따른 농어업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3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000억원’에서 ‘20년간 매년 1000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농어



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 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간 상생 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

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역이익공유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지원 전 의원, 단국대 석좌교수로

대북관계·국제 정세 등 강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모교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박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지난 1일자로 임명받고 오늘 첫 출근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어 “후배이자 학생들에게 대북관계,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문제를 강의하겠다”며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교수는 처음이니 기쁘고 설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모교이니 후배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과도 적극 소통, 알찬 강의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1967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졸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한 뒤,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목표에서 연속 당선되는 등 4선 의원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증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